

總·學長 選出을 지켜보며

金 炳 旭

(忠南大 國語國文學科)

木浦大를 시발점으로 해서 大學 總·學長의 직선은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다만 최근에 오랜 전통을 가진 高大에서 總長 선출을 둘러싸고 教授와 學生, 職員 노조, 講師 노조의 대립과 갈등은 大學에 몸 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이 짧은 글에서 大學의 民主化의 과정에서 왜 總·學長 直選이 필요하며,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말해 보려 한다. 필자가 몸 담고 있는 忠南大에서도 지난 1월 28일 教授協議會 주관으로 교수들에 의한 직선이 아주 모범적(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필자 주변의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하여 말하겠다.

우리의 大學史에서 4·19 이후 극히 짧은 기간 동안 大學의 최고 행정을 맡는 總·學長의 직접 선거가 있었으나 5·16 이후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87년 6월 民主抗爭으로 大學의 民主化와 自律化가 쟁취되고 난 후 大學의 民主化 과정의 일환으로 總·學長의 직선은 하나의 시대적 사명과도 같은 것이 되었다. 독재 정부는 항상 大學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 따라서 國立大나 私

立大를 막론하고 大學을 統治權力的 철저한 통제하에 두려고 했다. 그 결과 '전국 大學 總·學長會議'를 통하여 大學의 總·學長들은 독재 권력의 下手人 취급을 받아 왔다. 非教育專門人인 관료들에 의해서 教育專門人이 통제를 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大學 教授나 學生들은 總·學長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었다. 文教部의 지시를 받아 앵무새처럼 大學의 教育 指標를 시달하고 그에 따라 大學 行政을 펴 왔던 과거의 관료주의적 總·學長들을 누가 존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비정상적 대학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總·學長의 직접 선출은 시대적 당위성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大學의 總·學長의 직접 선거가 곧 大學의 民主化와 等式이라는 단순한 論理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거창하게 外國의 實例들을 들고 싶지도 않다. 다만 오늘의 大學人이라면 그동안 너무나 他律에 의해 지배 당해 왔기 때문에 우선 大學의 民主化의 첫 과정에서 大學 行政의 최고 책임자를 직접 선출하겠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總·學長의 選出 方式을 놓고도 文教部는 과거의 타성에 젖어

‘大學總·學長選出委’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을 고집하다가 많은 大學들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 아무런 원칙도 제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영겨 주춤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말았다.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박게 되면 직접 선거에서 오는 과열 분위기를 고려하여 간접 선거를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어도 앞으로 두 기간(8년) 동안은 직접 선거가 최상의 방법이라고 본다.

大學의 민주化는 人事의 公正性, 學問과 教授의 自由, 예산의 公開와 그 집행의 公開에 있다. 그리고 學生들에 대한 自律權을 부여하여 學則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직접 선거로 總·學長을 선출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의 선거 기간 동안 總·學長 후보들은 公約을 하게 되어 당선 후의 대학 행정의 지포로 삼을 수 있어서 대학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묵시적인 合議點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의 학문적 업적, 人性, 大學 行政 能力 등이 선거권을 갖는 教授 또는 大學人에 의해 선별되게 된다. 과거 國立大의 경우는 文敎部長官의 제청에 의해서 大統領이 總·學長을 任命해 왔다. 현재도 형식상으로 이것이 변한 것은 아니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판이하다. 즉 현재까지 全南大, 江原大, 忠南大의 경우 교수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總長을 선출했고, 거기에서 당선된 후보를 문교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했다. 現行 教育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는 과히 超法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불원간에 教育법 개정으로 合法化될 때 우리의 대학은 진정한 民主化를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總·學長 直選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방법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과거 독재 정치의 유산에서 비롯된 大學教育의 획일화가 대학에서도 활개를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선 國立과 私立으로 나누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國立大의 경우는 完全한 公務員 勞組가 설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公務員 身分인 敎職員의 선거권은 주어질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간접적인 官權 介入의 길을 터놓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教育的 見地에서 볼 때 학생들에게는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大統領이나 國會議員 선거를 실례로 들어 선거권을 주장하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육적 전통에서 볼 때 이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國立大의 경우는 教授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民主的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 敎職員과 학생들은 각자의 적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敎職員들도 자유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까지의 관료적 관행을 벗어나서 참다운 民主 大學 건설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공무원에게 자유 노조 결성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학생들의 민주적인 學事 行政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하나의 예를 들면 學事 行政과 기성회비의 예산과 결산을 學生 代表에게 설명하고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다. 사회에 점차 민주화가 정착되면 지금과 같은 학생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오늘의 현실이 과도기인 만큼 학교 당국과 학생의 상호 불신이 학내 분규의 쟁점이 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직선 총장들은 민주적인 敎育觀으로 학생을 설득하고 그들의 주장이 교육적으로 타당할 때 과감하게 수용하여 분쟁의 소

지를 없애야 한다.

私立大는 대학마다의 建學精神이 달라 일률적으로 잘라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대학의 경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많은 대학들이 世宗大와 朝鮮大의 경우를 표본으로 삼아 總·學長의 직접 선거에 대학의 이해 당사자인 교직원, 학생, 동창회, 학부형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私立大의 경우 財團이 財政적으로 튼실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일부 사립대는 家族中心의 財團 운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社會共有의 학교마저도 私有物인양 운영하여 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反民主的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상당 수 있다. 이러한 대학에서는 교수만의 總·學長 직접 선출이 대학의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대학들에서는 대학의 주체의 하나인 학생들의 참여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이어야 한다. 대학의 설립자 또는 理事陣이 교육의 민주화의 의식이 자리잡게 되면 학생들은 직접 참여보다는 監視者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따라서 私立大의 경우 總·學長 선출에 어떤 획일적인 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國立이나 私立을 막론하고 새로운 民主化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학내적인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 제일 큰 쟁점 중의 하나가 대학 總·學長 직선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다음으로 大學 예산의 공개일 것이다. 실제로 이들 문제는 서로 얽혀 있는 셈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학이 민주화되면 그 구성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개진되고 수렴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우리 대학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중앙 집중화 현상이 대학의 自律性을 움츠려 놓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前時代, 다시 말해서 독재 정부

의 대학 운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 하는 정부 당국이나 일부 사립대의 대학 운영자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학의 민주화는 멀고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민주적인 교육이란 개개인의 人格을 존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이것이 무시되고 있다. 특히 민주적 개혁을 부르짖는 교수나 학생들 중에도 反民主的인 독단적 사고 방식이 팽배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학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단한 위정자의 탄압을 받아 왔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學問의 眞理를 부단히 추구해 왔다. 대학은 그 생각은 진보적일지 모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극히 보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양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대학은 그 위상이 올바르게 정립된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대학들은 과거의 수동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민주적인 대학의 위상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과감한 자기 변신을 해야 할 때다. 이러한 變革의 論理에서 總·學長의 直選을 바라 보아야 하고, 직선에 임하는 후보들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습성을 철저히 떨쳐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總·學長에 당선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역사의 아이러니다.

8·15 이후 우리의 대학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대학은 변혁기마다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도 해 왔다. 특히 독재 정부에 맞서서 民主化運動을 주도해 온 것도 대학이었다. 우리의 現代史에서 대학은 언제나 知性의 최후의 보루였다. 그리하여 1987년의 6월 항쟁을 통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도 反民主的의 세력들이 復古的인 獨裁로 回歸을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대학은 더 이상 總·學長의 직접 선출을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해

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민주적으로 결정될 때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모든 대학들이 그 구성원의 참다운 합의에 의해서 바람직한 선거 제도를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 선출된 總·學長들이 大學의 民主化를 과감히 실천할 때 우리의 대학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들은 시대적 사명감을 인식하여 모든 문제를 艱難에 맞게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결국 대학의 민주화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 그 목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